

부산MBC 자갈치아지매_언론어게인

20210219

MC/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박정희 사무국장과 함께 한주 동안의 지역언론 보도를 살펴보는 언론어게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민/ 안녕하세요.

MC/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민/ 네 보궐선거 TV토론 중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인데요,

2월 15일부터 양당은 TV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경선 후보의 정책과 후보 검증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미디어선거, 정책 선거에 집중한다는 취지입니다.

양당의 토론회는 지역방송 3사가 나눠 중계하고 있는데요, KNN이 4회, 부산MBC가 3회, KBS부산이 1회 방송합니다.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주관·주최하는 토론회인 만큼 방송 제작비는 각 정당에서 부담하는 형식이고요.

토론을 통해서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후보 상호 검증 내용, 그리고 토론 태도 등을 볼수 있는데요,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방송의 적극적인 중계는 환영할 만합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과 관심이 덜한 보궐선거에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당내 경선후보 토론회가 각각 4회 방송되는 동안 소수정당, 무소속 후보에게는 정책을 알릴 기회가 편성되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MC/ 네 그런데 국장님도 설명했지만 이번 토론회는 정당 주관 토론이라 방송사의 편성(?) 권한 밖이고

또 두 정당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 유권자에 정보제공을 위해 경선 토론에 집중하는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각당 후보가 다 선출되면 형평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민/ 네 하지만 정당 주최 토론방송이라 해도 방송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공공재인 전파를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되기에 최소한의 형평성을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양당의 TV토론을 보면 국민의 힘은 맞수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데요, 4명 경선 후보다 보니, 총 8회에 걸쳐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가덕신공항, 경제 등 지역 이슈 토론을 4회 연속 진행하는데요

이들만 집중적으로 방송에 노출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토론회 이후에는 타언론에서도 토론내용이나 의미 등을 전하니까

결과적으로 양당의 후보들이 부각되고 또 두 정당에 제시하는 이슈와 의제가 집중 부각되게 됩니다.

이번에 부산MBC는 자체 유튜브 방송인 <예비후보 생생토크 ‘탈곡기’>, 자갈치아지매에서도 양당 경선 후보만 초대하던데 역시 아쉽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경선을 치르는 거대 정당 외에도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가 선거에 나서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 방송사에서 소수정당과 그 후보를 알리는 방법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MC/ 또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민/ 토론방송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내용을 뉴스 방송에서 점검하거나 해설하는 건 없어 아쉬웠습니다. 정당이 기획한 토론을 중계하는데 자족하는게 아닌가하는.

토론방송이 시작된 2월 15일부터 지역방송 뉴스의 보궐선거 보도를 봤는데요

지역방송 3사 모두 15일 저녁뉴스에서 TV토론 시작을 알리며 이후 일정과 미디어선거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또 토론방송에 나온 공방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토론에

서 나온 후보의 발언을 검증하거나 해설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KBS부산은 토론개최를 단신으로만 전했고(15일, 17일), KNN은 17일에 있었던 사 방송 토론 내용만 전했습니다. TV토론 시작 이후 부산MBC만 보궐선거 이슈로 떠오른 '한-일 해저터널' 논란을 짚었습니다.

MC/ 선거 보도 관련해 추가로 더 짚어주실 내용 있나요?

민/ 네 조금전에 방송이 토론방송에 대한 추가 취재, 검증이 없어 아쉽다고 했는데

요, 부산일보는 17일부터 [4·7 쟁점 현미경] 코너를 마련해 토론방송 및 선거에서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봐 눈에 띄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이를 통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4·7 쟁점 현미경'을 운영한다.)

박형준-이언주 맞수토론에서 스크린경마협회 업주 협찬으로 라스베가스 외유, 사행성게임업체로부터 축제 1억원 협찬, 게임업체 뇌물수수한 보좌관의 캠프 활동 등이 의혹으로 제기되었는데요

박형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전혀 몰랐다고 답했지만

당시 라스베가스 출장을 함께 다녀온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경우 해당 출장이 문제다 되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고 상임위도 문방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018년 금융감독위원장 후보가 의원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낙마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박후보 당시 보좌관이 실형을 산 것도 사실이라고 팩트체크 했습니다.

당시 검찰수사에서 라스베가스 출장, 축제협찬비 등 고발사건에 대해 박후보 의정활동과 관련성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없었지만 이해관계충돌 등 여지에 대해 타 사례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언주 후보 행보, 이언주 후보가 제기한 '불법자금 의혹' 등의 실체가 있는지를 주제로 보도했습니다.

MC/ 쟁점에 대해 맞다, 틀리다 꼭 판단을 내리지 않더라도 배경이나 후보간 입장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해설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겁니다. 후보 말을 따옴표로 전달하지만 말고 한번 더 짚어보는 보도가 많았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는요?

민/ 지역화폐 동백전 사업자가 교체되었는데요

대부분 언론에서 교체 배경과 과제 등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한 업체 사정에 주목한 언론도 있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KBS부산은 15일 <<'동백전' 1년 만에 운영사 교체...기대와 우려는?>에서 코나아이 경기, 제주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로 교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쇼핑몰, 배달앱 이용 등 모바일앱 활용 확대 기대, 동구, 남구 등 지역 화폐 연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짚었고

기존 체크카드 폐기, 카드 교체 불편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도 캐시백 위주에서 플랫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 기초단체 화폐와의 연계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부산일보도 새사업자 선정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외에도 <동백전 탈락 KT, 지역화폐 사업 어떡하나 >도 실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탈락으로 총사업 규모 절반이 감소될 위기에 지역화폐 사업자로서 위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캐시백에 의존한 동백몰 운영은 부산시 재원 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있어 쇼핑몰 등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개장 지연 등 동백전 관련 문제가 불어졌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비판도 있었는데요

탈락한 KT의 아픈 사정을 부각한 보도라 눈에 띄었습니다.

MC/ 동백전은 88만여장 발급되었고 시민, 자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인데요

제대로 자리 잡아 서민 경제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새 사업자에 대해서도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다음은 미디어 동향 관련 소식이라고요?

민/ 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허위정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3배까

지 묻는 언론피해구제방안 등을 포함한 6개 언론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중재법 3개, 정보통신망법 2개, 형법 1개로 구성된 이번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하고 있는데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해온 입장에서 입법 취지에 관해서는 공감하지만, 6개 개별 법안만으로는 언론의 공공성 강화, 신뢰도 제도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는데 점에서 아쉬움이 큼니다.

이와 관련해 민언련에서도 2월 10일 논평을 내고 입법 내용과 절차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절차 문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는 6개 법안을 추진하면서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성숙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안 내용에서도 모순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점이 나타나면서 언론통제, 과잉규제 등의 반발을 사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악성 댓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란 취지는 공감하지만, 게시판 운영을 제한하게 하는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 발생 시키는 댓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뿐더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운영제한 조치를 하게 하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제일 논란인 되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텐데요,

언론의 입자에서는 언론 자유가 크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언론의 허위보도 등에 우려가 큰 시민 입장에서도 실효성 등 면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징벌적’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3배 배상제일 뿐인데 ‘징벌적’ 개념이 강조돼 사회적 논란만 일으킨 것 같습니다.

피해 범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 등은 결국 법원의 몫인데 이에 대한 정비 없이 정보통신망법 개정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언론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처럼 정제되지 않은 개별 법안 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공론의 장을 거쳐 언론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미디어정책 수립,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MC/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박정희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감사합니다.